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지위현황

머 리 말

90년대초까지는 자유를 찾아 귀순한 북한이탈주민이 연간 10명 내외였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관심과 환대속에서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식량난 등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국내 경제사정의 영향으로 취업여건도 악화되어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정착에 애로를 겪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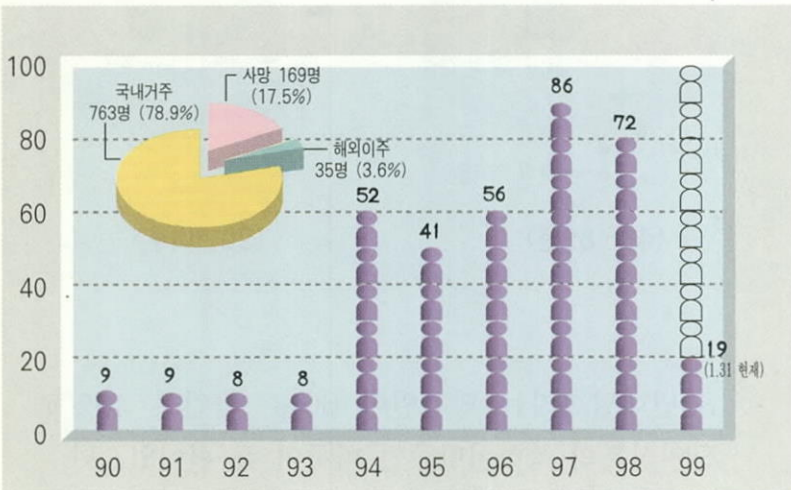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정부는 98년 12월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보완한데 이어, 금년에도 취업보장 강화 등 각종 자립·자활조치를 강구하여 정착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 차

I. 북한이탈주민 현황	1
II.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내용	3
●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 / 3	
● 합동조사 / 3	
● 정부시설내 보호와 지원 / 6	
●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와 정착지원 / 11	
III. 북한이탈주민 정착현황	14
IV. 정착여건 개선 추진현황	18
● 정착여건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 / 18	
● 이미 개선하여 시행중인 사항 / 19	
● 앞으로의 개선방향 / 23	
V. 맺는 말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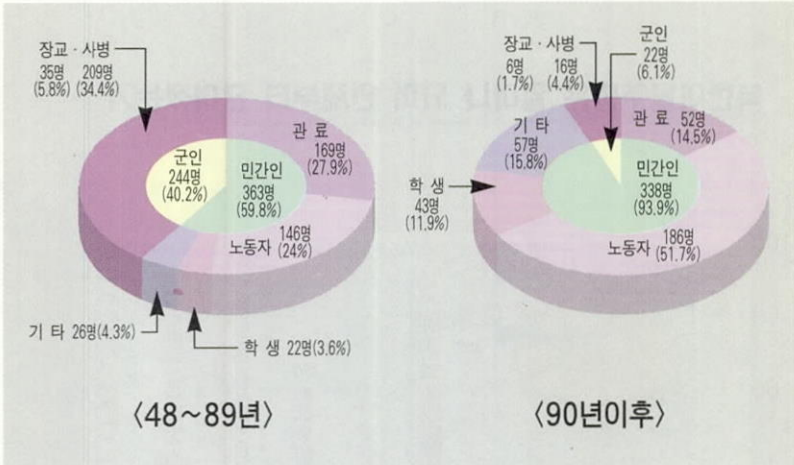
I. 북한이탈주민 현황

북한이탈주민은 얼마나 되며 언제부터 많아졌는가



- 지금까지 귀순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967명으로 이중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주한 자 204명을 제외한 763명이 현재 국내에 거주중이며
- 90년대초까지는 연간 10명 내외였던 북한이탈주민이 94년부터는 40~80여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분 변화추세는



- 80년대말까지는 민간인이 60%, 군인이 40%로 군인신분의 북한이탈주민 비중이 큰 편이었으나
 - 90년대 들어서는
 - 민간인이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군인은 6%에 불과하고
 - 특히 생활고와 연관된 노동자 신분 북한이탈주민의 귀순이 두드러지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 ☞ 노동자 출신이 24%에서 52%로 2배이상 증가

II.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

-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에 연고자가 없고 우리와 상이한 체제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이질적인 우리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활 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합동조사(5~7일)후 시설보호 1년, 거주지보호 2년 등 약 3년간의 직·간접적인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은 정착지원시설에서 1년, 거주지에서 2년간 보호하도록 규정

● 합동조사

북한이탈주민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면 정부시설에서 통상 5일 내지 7일동안 조사를 하는데

-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 경찰청 · 국방정보본부 · 정보사 · 기무사 등 5개기관 합동으로 실시하며, 국가정보원이 조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은 국가정보원장이 보호여부 결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조사목적은 무엇이며 분위기는 어떠한가

- 북한이탈주민 조사는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정해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국제형사범죄자, 위장이탈 혐의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내고
 - 사회정착을 지원할때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신원사항과 학 · 경력,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심사절차의 하나입니다.

-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조사는 범죄사실을 규명하여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신문과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재북시 지위와 연령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고 조사 취지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어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합동조사 장면

● 정부시설내 보호와 지원

북한이탈주민 보호시설 운용실태는

- 현재 운용중인 북한이탈주민 보호시설은 서울시내 모처에 있는 현대식 건물로
 -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하는 방에는 침대·소파와 TV 등 가전제품이 구비되어 있으며
 - 2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규모의 식당과 헬스장·라켓볼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 한편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100여명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용시설을 서울근교에 건립(99.5 완공예정)중에 있습니다.
-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고 규정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하는 방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용하는 식당(22.5평)으로 식당내에는 TV·에어콘 등 가전제품과 400여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

정부시설에서는 어떤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나

- 시설보호 기간중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신분취득, 정착금 지급 등 거주지 편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우선 약 5주동안의 사회적응교육과정을 통해
 - 우리의 사회·경제·문화·역사·언론 등에 관한 기초교육과 가나안농군학교(5일)·음성꽃동네(2일) 등 방문교육을 하고 있으며
 - 백화점·대중교통·관공서 이용실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장 체험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거주지 편입에 대비
 - 취직 및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해주고
 - 생계기반 마련을 위한 정착지원금 지급과 거주에 필요한 임대주택을 알선해 주고 있으며
 - 북한에서의 학력과 자격을 인정하여 취학 및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체험교육중 운동을 통해 친목 도모



충북 음성군 꽃동네를 방문하여 보육아동들을 돌보는 북한이탈주민들

- 한편, 현재 건립중인 정착지원시설이 완공되면
 - 보호기간을 현재의 5~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음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우선 사회적응교육은
 - 현재의 5주에서 3개월로 기간을 대폭 늘리고
 - 교육대상자의 수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며

- 6개월 정도의 직업훈련을 실시, 1인 1기 이상의 기능취득을 장려하고 직업훈련 이수자에게는 해당 분야 취업을 적극 주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와 정착지원

거주지에서 신변보호를 하는 이유와 방법

○ 거주지 신변보호를 하는 이유는

-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본주의 생활방식에 미숙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간뒤 일정기간은 누군가가 이들의 생활을 안내하고 지도해 줄 필요가 있으며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북한의 테러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재북가족을 약점으로 한 간첩 등의 접근 가능성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97.2 북한이탈주민 이한영이 남파간첩에 의해 살해되었고, 배우 출신 신영희의 수기 “진달래꽃 필때까지”를 KBS가 드라마화 하여 방영하자 북한에서 KBS와 신영희에 대한 테러 위협을 한바 있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주지 신분보호는 민간인 신분은 경찰청에서, 군인 신분은 국군기무사에서 사회편입후 일정기간 담당관을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친목단체인 「숭의동지회」(민간인)와 「통일연구회」(군인)에 가입, 서로 의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그들의 친목단체인 숭의동지회 사무실 입주(97.5) 축하모임에서 축배를 들고 있다.

거주지에서의 정착지원 내용은

- 의료보호를 통해 무상으로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생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직업을 구하지 못하였거나 실직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과 재취업을 알선해주고 취학하였을 경우에는 공납금 면제 등의 교육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간의 참여와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하에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 종교·사회단체들과의 결연사업과 법률·여성·종교 등 분야별 상담활동 등의 후원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20여개 단체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 참여

Ⅲ. 북한이탈주민 정착현황

99.2 현재 사회에 편입되어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718명중 93년말 이전에 귀순한 430여명은 대부분 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한 상태이며 일부는 크게 성공하여 동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성 공 사 례

- 김지일(35세, 90.8 귀순)은 「두비시스 템」이라는 벤처기업을 설립, 미국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등 백만장자를 꿈꾸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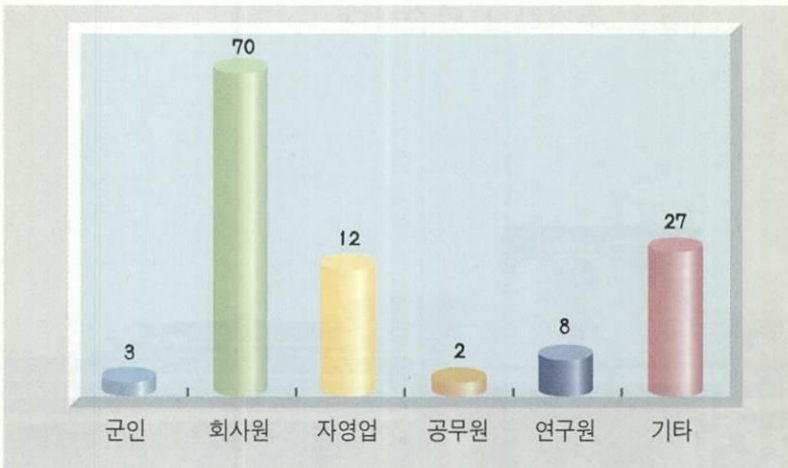
- 김용(39세, 91.10 귀순)은 북한음식전문점(상호명 모란각)으로 크게 성공한 경우인데
 - 96.9 경기도 일산에 처음 문을 연 「모란각」은 2년 5개월만에 국내에만 41개의 분점을 개설하는 등 대형 체인점으로 급성장하였고
 - 현재 미국 LA 한인타운, 일본 동경 등 해외 체인점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김용이 운영하는 북한음식 전문점 「모란각」의 송파체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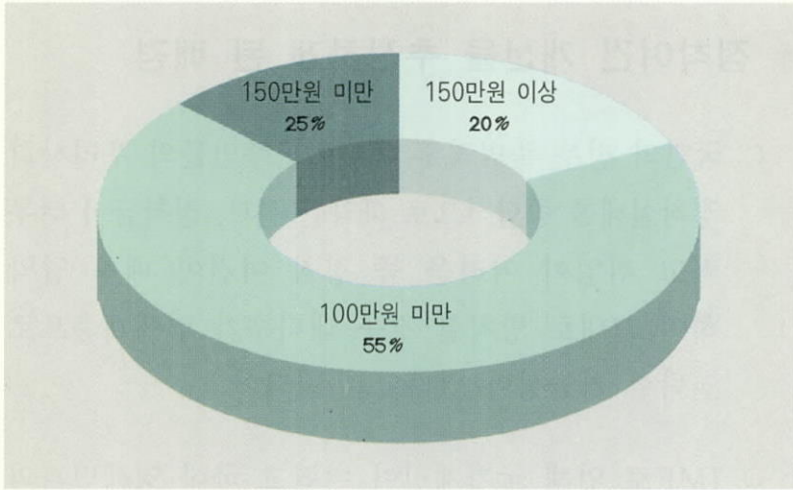
그러나 93.12 제정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따라 크게 줄어든 정착금을 지급받은 94년이후 북한이탈주민중 상당수가 직업이 없거나 질병·고령 등으로 생활이 불안정한 편입니다.

94년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분포도



- 94년이후 사회정착 북한이탈주민 총 282명중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주부, 학생, 아동 등을 제외한 취업 가능자는 186명으로
- 이중 122명(66%)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32% 정도는 자영업·경비원 등 불안정한 직종입니다.

94년이후 북한이탈주민중 취업자의 월평균 수입



- 94년이후 사회정착 북한이탈주민 282명중 취업자는 122명(66%)이며
- 취업자들의 월평균 수입은
 - 100만원 이상이 45%(55명)이고
 - 55%(67명)는 100만원도 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IV. 정착여건 개선 추진현황

● 정착여건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

- 국민의 정부 출범직후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사회 정착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결과, 정착금이 너무 적고 취업이 어려운 등 정착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다수가 영세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 IMF로 인해 국가재정이 어렵고 국내 영세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찾아온 동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도적 입장에서 정착여건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은

93.12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이 폐지되고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1인당 1,900만~1억 5천만원에서 860만~1,5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데 이어 97.7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1인당 최소 정착금이 또다시 축소(860만→690만)

● 이미 개선하여 시행중인 사항

정착금 증액과 주택지원 확대

- 98.12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 1인당 기본정착금을 690만원에서 2,760만원으로 대폭(4배) 증액하고, 주택지원을 11~17평에서 13~25평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생계곤란자에게 특별생계보조금 지급

- 정착금을 적게 받은 93.12~98.12간 북한이탈주민중 고령·질병·무직 등으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169세대에 대해 월 20~35만원의 특별생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특별생계보조금은 생활정도와 여건에 따라 20만원(24세대), 30만원(127세대), 35만원(18세대) 등으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수당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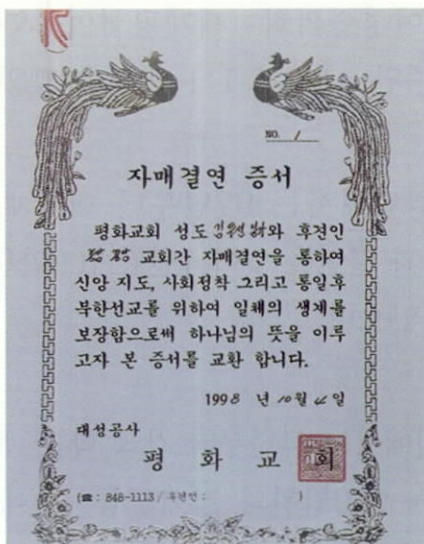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훈련에 참가할 경우 훈련을 무료로 받게함은 물론
- 세대당 월 20만원 내지 51만원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확대

- 북한이탈주민들이 재북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공허감 등을 극복하고 조기에 심리안정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종교계·사회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결연을 적극 주선하고 있습니다.
- 주요 자매결연 사례를 살펴보면
 - 종교계에서 북한이탈주민 200여명과 결연을 맺고 생활비 보조·가재도구 구입 등 6억 3천만원 상당의 지원을 하였으며
 - ☞ 「극동방송」과 「영락교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나갈 때 세대당 70~100만원 상당의 가재도구나 가전 제품을 구입해 주고 있음

- 민주평통 여성협의회 · 세계평화여성연합 등에서는 북한이탈주민 41명과 1:1 결연을 맺었고
- 라이온스클럽에서는 97년부터 대학재학 북한이탈주민 32명과 결연을 맺어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백자장학회에서는 금년부터 각급 학교 재학생 60명에 대해 100~200만원의 장학금을 줄 예정으로 있는 등 종교계와 사회단체 등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에는 정부시설 보호기간중 북한이탈주민과 교회 등이 결연을 맺은뒤 「자매결연증서」까지 교환하는 등 자매결연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김두선일가의
자매결연 증서



김두선일가가 종암중앙교회와의 결연식을 가진뒤
교회관계자들과 촬영한 기념사진

● 앞으로의 개선방향

획기적인 취업보장책 강구

- 올해안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편입후 일정기간 동안 취업을 보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착지원체제 보완

-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광역 16개, 기초 232개)에 거주지보호 담당관을 지정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 노동부와 지방노동사무소(46개)에 고용상담관을 지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활성화

- 법정 후원단체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정부가 일정액을 출연하거나 모금 등의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 동 기금으로 생계곤란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 생활 상담센터 운영, 영농·창업자금 융자 등 명실상부한 후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호칭 개선

- 법정호칭인 “북한이탈주민”과 통상호칭인 “귀순자”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 이를 대체할 호칭을 발굴하여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적절한 호칭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V. 맺는 말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이 우리의 통일의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인식 하에 관련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고치는 등의 전향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사회에 조기에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들의 후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국민 모두가 통일의 초석을 쌓아간다는 심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